

수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발신 : 서울지방검찰청 총무부(담당자 : 임태민)

제목 : 참여연대의 「불법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망한다는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경악, 논평에 대한 서울지검의 입장

1. 지난 3. 14.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에서는 「불법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망한다는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경악」이라는 제목 하에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은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논치보기로서 권력의 수사권 침해와 다름없는 것...1.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3일) 서영제 서울 지검장이 "경제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고 수사시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벌비리 관련 수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서 지검장은 재벌비리 관련 수사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검찰의 수뇌부가 상황논리에 휘말려 자의적으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2. 그렇지만, 서영제 검사장님은 서울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래 한번도 재벌비리 수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단지, 취임시에서 「...우리 검찰은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단세포적인 사고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해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빈자든 국민 모두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보호를 받아 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거듭되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 검찰권 행사는 '수사를 위한 수사」

‘기소를 위한 기소’로서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될 뿐입니다...’라고 말씀 하였던바, 이는 앞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 국가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약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수사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울지검 총무부에서는 서영제 검사장님의 취임사 원본을 송부하오니, 취임사를 검토한 후 추측성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논평한 부분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영제 검사장 취임사 1부